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사회과학대학 조 순

이 글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개관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管見을 제시함에 있다. 제1절에서는 IMF 이전의 壓縮성장, IMF 이후의 壓縮改革의 과정을 鳥瞰함으로써, 한국 경제 문제의 배경을 살핀다. 제2절에서는 한국경제의 현황 및 當面課題에 관하여 논한다. 제3절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1. IMF: 한국경제의 分水嶺

1) IMF 이전의 壓縮成長

1997년 11월 한국경제가 IMF를 맞은 것은 참으로 큰 사건이었다. IMF는 한국경제의 큰 분수령이었다. IMF 이후의 한국경제는 國民生活, 産業, 企業, 金融, 政府, 對外關係 등의 모든 부문의 양상이 IMF 이전의 그것과는 기본적으로 달라졌다.

IMF 이전의 한국의 공업화는 徹頭徹尾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경제운영의 목표는 수출과 성장의 極大化에 두어져 있었고, 산업정책의 목표는 自立經濟의 달성이었으며, 무역정책은 貿易收支黑字의 극대화를 겨냥한 ‘重商主義’

(mercantilist)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외자도입은 상업차관 및 공공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외국인의 經濟支配를 우려하여, 직접투자는 禁忌視되어 있었고, 금융시장·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尠視되어 있었다. 당시의 한국경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의식에 있어서나, 民族主義的인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었다.

기업운영에 관한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韓國株式會社’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한국은 宛然히 일종의 ‘國家資本主義’ 체제 하에 있었다.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산업정책의 중점을 중화학공업 육성에 두었다. 유능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왕성한 기업정신을 발휘하여 電子, 機械, 鐵鋼, 造船,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분야에 대규모의 투자를 행함으로써, 산업구조는 획기적으로 고도화되었다. 선진국이 긴 세월을 걸쳐 이룩한 성장을 단시일 내에 壓縮하여 성취하였다는 의미에서, 開發年代의 한국경제성장은 ‘壓縮成長’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무리가 쌓여지고 있었다. 巨視的으로는, 不實投資·重複投資가 누적되고 賃金·物價의 인플레이가 慢性化되었다. 微視的으로는, 기업의 不實化, 중소기업의 부진, 금융부문의 낙후, 소득 분배의 불균형, 政經癒着의 고질화, 전투적 노조의 출현 등, 後日 한국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할 諸要因이 胚胎되고 있었다.

1970년대 말부터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과 상당 폭의 構造調整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제5, 6공의 경제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것이 금융의 자유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90년대를 통하여 경제운영의 기초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구조의 불균형은 계속 확대되어 국제경쟁력은 추세적으로 약화되었다. 1997년 초에 이르러서는 일부 대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IMF를 불러올 前奏曲이었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추세에 있는 동안 국제정세도 世界史的인 변화를 겪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세계는 글로벌 시대에 진입했다. 미국경제는 IT혁

명에 편승하여, 이른바 ‘新經濟’ (new economy)의 호황기를 맞아 거품을 자아내고 있었다. 국제자본 이동은 크게 촉진되어,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금이 南美 및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新興市場’ (emerging market)에 밀물처럼 몰려들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가 日常化되었다. 마치 바이러스가 병약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듯이, 투기 펀드(fund)는 약한 신흥시장을 집중 공격하여, 이 나라들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불난 집에서 家財를 줍듯이 금융 및 실물자산을 廉價로 매입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1990년대 후반의 한국 경제는 투기펀드의 공격을 받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경제에 기업의 對外短期負債가 과다했다. 경상수지가 악화하여 外債의 償還能力이 의심스럽게 되자, 외국인들은 경쟁적으로 자금을 인출했다. 외환당국은 환율의 上昇을 막고자 적극적으로 外換市場에 개입했으나 力不足이었다. 보유외환이 급격히 감소하여 곧 바닥이 났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한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1997년 11월 끝내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2) IMF 이후의 ‘壓縮’ 改革

IMF는 원래 각국 통화 간의 固定換率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나, 1972년 미국이 金換制度를 포기한 후로 IMF의 목표는 變動換率制度 유지에 두어지게 되었다. 外換不足國에 待期性借款을 공여하여 국제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IMF의 주요임무가 되었다. 그 임무에는 短期的인 것과 長期的인 것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短期的인 목표는 채무국으로 하여금 外債를 償還하도록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IMF의 임무인 세계금융질서의 유지란 곧 국제 금융거래의 안전을 의미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은 곧 貨幣의 국제금융업자들의 債權行使의 安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IMF는 결과적으로 貨幣 금융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IMF가 채무국 구제를 위한 용자를 한다면 그 목적은 채무국으로 하여금 金 債務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조건을 附帶한다. 이러므

로, IMF의 借款은 채무국을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外國債權者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MF의 長期的인 목표는 IMF의 차관을 받은 受援國의 경제를 글로벌경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受惠國의 대외금융거래를 자유화하여 ‘이익’을 주고, 동시에 외국금융업자들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겨냥하여, IMF는 受援國에 대해,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는 관계 없이 항상 다음과 같은 借款條件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왔다. ① 金融·財政의 긴축, ② 무역 및 금융·자본시장의 自由化·開放化, ③ 공기업의 民營化, ④ 작은 정부의 실현 등이 이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패키지는 1970년대에 일부 南美 나라(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특히 1970년대, 1990년대에 걸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시행되었다. 이 政策 패키지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워싱턴의 合意(共感)’(Washington consensus)라고 부르기도 한다.¹⁾

IMF는 한국에 대해서도 차관조건으로 ‘워싱턴 合意’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 차관조건을 받은 한국정부는 과감하게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금융기관 및 기업의 退出, 賣却, 合併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IMF의 요구에 자체의 정책을 곁들여, 기업, 금융, 공공부문 및 노동의 ‘4大部門의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 이것을 정력적으로 추진했다. 이 4大部門은 사실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이었다. 한국정부는 이 방대한 개혁작업을 완성하면,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경제에 쌓인 構造的 脆弱點은 말끔히 제거되고, 경제의 효율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 개혁이 성공하려면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 개혁절차와 추진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긴 시일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구상·시행한대로 1, 2년의 作業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1)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재무부와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 및 국제 금융회사 등에 의하여 그 妥當性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워싱턴의 合意’라 부른다.

IMF의 개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基準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自己資本比率 8%’라는 國際決濟銀行(BIS)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8%라는 맹랑한 숫자가 금융기관의 生死與否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8% 이상의 금융기관은 退出되고 그 이하는 存置되었다. 기업에 대해서는 ‘負債比率 200%’라는 기준이 도입되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企業構造調整委員會’가 해당기업의 回生可能與否를 판정하고 회생 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一定期間 동안에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한국에는 企業 賣買의 시장도 없었고, 도산기업의 청산 등에 관련된 법규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보통 500~600%였었는데, 소유자산의 매각으로 200%의 숫자를 맞추고자 했지만 국내기업에는 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산은 외국인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200% 달성에 생사가 달린 금융기관이나 기업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준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할 이유도 모르면서, 數值目標達成에 급급했다. IMF 개혁은, 문제기업들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주어진 숫자를 달성하도록 疾風과 같이 추진되었다. 당연히 긴 時日이 걸려야 할 改革作業을 短時日內에 壓縮해서 끝맺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壓縮改革’이었다.²⁾

壓縮改革의 효과는 무엇인가. 여기에도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 단기적인 효과 몇 가지를 보자. 우선, IMF가 추진한 강력한 금융 재정의 긴축³⁾은 한국의 經常收支를 크게 개선하여 한국은 債務不履行을 免할 수 있었다. 금융부문을 보면,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 인수, 합병되었다. 33개나 되던 은행이 5년 동안에 절반으로 줄었고, 살아남은 주요은행의 약 반수가 實質的으로 외국인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의 경우도 비슷하다. 많은 기업이 퇴출, 매수, 합

2) 중국의 鄧小平 개혁은 1979년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中斷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의 대처개혁이 11년, 미국의 레이건-부시의 개혁도 10여 년이 걸렸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개혁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대로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超高速으로 이루어진 壓縮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 긴축으로 한국의 명목 금리는 한때 30%로 오르고, 환율은 미 달러 對比 거의 2,000원대에 육박했다.

병, 해체되었다. 10대 재벌기업 중, 대우, 쌍용, 기아가 없어졌고, 살아남은 상장 기업의 株價總額의 40% 이상이 외국인의 수증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대표적 은행인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식 소유는 2006년 3월 7일 현재, 전체 주식의 85.4%, 외환은행 74.3%,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53.9%, POSCO 68.6%, KT&G 60.0% 등으로 韓國有數의 기업 중 50%를 上廻하고 있는 것이 많다. 또 금융기관에 있어서나 기업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해고·정리되었고, 실업, 특히 청년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포철, 한전,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주식이 매각되어, ‘民營化’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IMF의 新自由主義 정책을 壓縮적으로 추진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나라의 재산이 엄청난 손실을 보았더라도, 그 대가로 기업이 활성화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에 활기가 생겼다면 개혁의 보람이 있었겠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기업의 財務諸表가 개선되고, 금융이 개방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지만, 경제의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GDP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의 南美 나라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재정이 개선되고,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했으나 경제에는 沈滯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었다.⁴⁾ 1980년대, 90년대의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은 이자율의 대폭 인상, 환율의 대폭 절하 등의 IMF식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단 안정은 달성되었으나, 이른바 Tequila Crisis라는 거시경제의 沈滯를 맞은 바 있었다.⁵⁾

경기침체에 직면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소비의 활성화와 內需市場의 振作

4)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아시아 나라들도 거의 예외 없이 끝내는 남미처럼 경제침체를 면할 수 없다는 일본학자들의 연구와 주장이 있다. 內橋克人, 佐野 誠, 『ラテン・アメリカは警告する』, 新評論, 東京, 2005 참조.

5) 新自由主義 정책의 남미 나라에 환율의 안정, 물가안정 등은 가지고 왔으나, 경제성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으로는 Paul Krugman,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Norton, New York, 1999의 제3장, ‘Warning Ignored’ Latin America, 1995 참조.

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 수단으로 건설경기를 부추기고, 카드의 사용을 獎勵했다. 결과는 信用不良者의 量産이었고, 성장동력의 활성화는 없었다. 작년 2005년의 GDP 성장률은 4.0%(잠정치)로서 아시아에서는 下位圈의 實績을 보였다.

2. 한국경제의 현황

1) 壓縮成長과 壓縮改革의 後遺

2002년의 大選結果로 다음해 2월부터 ‘참여정부’가 집권을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과거 정권으로부터 두 가지의 負의 遺産을 물려 받았다. 하나는 壓縮成長의 후유이다. 금융부문의 落後, 중소기업의 不振, 분배의 불균형,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 이것이다. 이들 구조적 불균형은 상당부분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IMF 이전에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오랜 不均衡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舊型不均衡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후유는 壓縮改革의 후유이다. IMF 壓縮改革의 결과로 한국경제에는 規制緩和, 자유화 확대, 政經癒着 축소 등의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다. 그 대가는 엄청났다. 단기적인 것으로서는 64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富의 상실 등이 있다. 그러나 壓縮改革은 단기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치유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후유를 남겼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IMF 이전부터 내려온 불균형에 추가하여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불균형은 IMF에 의해 새로이 생겨난 불균형이라는 의미에서 新型不均衡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쟁력 약화는 이제는 成長動力의 약화로 定着되고, 과거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兩極化현상으로 深化됐다.

신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신정부는 경제 운영의 경험이 없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다. 간단없이 밀어닥치는 새로운 문제에 밀려서, 많은 경우에 對症療法으로 정책을 수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정책의 一貫性, 整齊性을 확보하지 못한 채 3년이 흐르고 말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후유의 결과들도 모두 이 정부의 잘못의 결과로 치부되고 있다.

IMF 전에 구축된 舊型不均衡을 IMF가 깨끗이 치유해주리라는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다. IMF개혁은 신자유주의의 개혁으로서, 그 본질 속에는 새로운 불균형(新型不均衡)이 內在되어 있었다. 양극화라고 불리는 일련의 현상이 그 중의 하나이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정책기조가 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後述),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양극화가 존재하는 한 成長動力의 활성화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新自由主義와 經濟政策

많은 국민이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前記 두 가지 後遺는 4반세기에 걸친 압축성장과 압축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간단히 치유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 압축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이룬 新自由主義 哲學이 경제정책을 주름잡는 한, 두 가지 후유를 '극복'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成長動力이란 글자 그대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엔진의 힘을 의미한다. 개발 연대로부터 우리 경제 성장의 엔진은 무엇이었던가. 그 것은 政府主導가 가지는 活力과 대기업 그룹의 力動性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가 약화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大馬不死의 대기업이 추락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실한 엔진을 代替할 만한 새로운 엔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몇 개의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경제 전체의 動力回復을 가져 오기에는 부족하다. IMF 壓縮改革을 어렵사리 견디어낸 기업도 전과 같은 投資의 의욕과 능력은 없어진 상태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가 發行株式의 50% 이상이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감에 따라 경영권 방위가 대기업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목표가 長期的인 成長爲主가 아니라, 단기적인 株主 이

익의 極大化로 바뀌진 상황 하에서, 개발연대에 있어서와 같은 왕성한 투자의욕이 유지될 수는 없다. 또 전투적인 노조의 존재, 협소한 국내시장, 정부규제의 번잡 등 때문에 투자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것도 성장동력 약화의 요인이 되었다.

중소기업은 어떤가.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下請企業이 많고 대기업이 어려워질 때 중소기업은 먼저 어려움을 당해 왔다. 따라서 대기업이 상실한 성장동력의 약화를 중소기업이 補填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3만 개에 가까운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감에 따라,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IMF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

양극화 역시 간단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현상이다. IMF 이전의 압축성장 과정에 나타난 경제의 二重構造가 정착된 데다가, IMF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지향한 압축개혁의 대수술을 치른 한국은 양극화라는 新型不均衡을 맞이했다.

新自由主義는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敎條主義的인 自由放任을 信條로 하는 새로운 英美의 이데올로기⁶⁾이며,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되는 것을 當然視하는 ‘社會的 다윈주의’ (Social Darwinism)의 철학이다. “The winner wins all; the loser loses all”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이 분배의 양극화를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인 미국경제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中産層의 경제적 지위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⁷⁾ 미국 기업에 있어서의 給與의 推移에도 이것이 克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1980년대의 10년 동안에는 감소하였다가 일찍이 보지 못한 호황기였던 1990년대에 약간 증가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로 증가한 것이 없다. 이에 비해 회사의 CEO에 대한 보수는 垂直上昇하고 있다. 특히 Enron, Worldcom 등의 會計不正

6) 자유방임의 철학은 옛날부터 英美의 이데올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18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의 自由放任의 철학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과격하고 敎條主義的인 것은 아니었다.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이 종래의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로부터 금융자본주의(financial capitalism)로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본다.

7) 이에 관련된 가장 최신의 연구결과의 요약으로는 Richard Sennett, “Middle-aged, Middle-class, Stranded by the ‘New Economy’”, *Financial Times*, March 7, 2006 참조.

이후 CEO에 대한 지나친 보수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이것을 막고자 제정된 Sarbanes-Oxley Act와 뉴욕증권거래소의 새로운 규정이 CEO 보수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보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⁸⁾ 급여뿐만이 아니다. 金融運營 내지 投機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더더욱 분배의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新自由主義를 따르는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성장동력의 약화와 경제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自由放任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방임은 성장동력을 강화하면 했지, 약화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 것 같다. 또 설사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정부가 이것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自由放任의 이론은 아담 스미스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國富論』을 精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스미스의 이론은 자본주의를 讚揚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教條적인 면이 없다. 스미스 이후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자본주의가 세계를 制覇하면서 스미스의 自由放任 이론을 教條主義로 개조하여 그들의 이론적 방패로 삼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교조적인 자유방임의 이론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되었다. 이에 1926년 케인즈(John Maynard

8) 미국의 급여 불균형의 극적인 예는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연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2003년, 미국의 100대 기업 중 70개 기업의 CEO들의 平均年俸은 \$14,100,000이었다.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대통령 직속의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의장인 William Donaldson의 연봉은 \$142,400로서, Donaldson이 전기 CEO의 연봉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리자면 99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Alfred Lerne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Delaware, *Executive Compensation - Delaware Discourses, Views from the Courtroom and the Boardroom*, Vol. 1, No. 1 August 2004 참조.

Keynes)가 나와서 자유방임의 이론은 논리에 있어서나 현실에 있어서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응변으로 설파하였다.⁹⁾ 그 후 약 반세기 동안 自由放任은 이론에 있어서나 정책에 있어서나 廢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유방임은 죽지 않고 隔世遺傳(atavism)의 생명력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Thatcherism, Reaganomics의 문패를 단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되살아났다. 이것은 自由放任의 국제적 확대적용을 지향하는 균형을 잃은 과격한 이데올로기이며, 정신에 있어서나 논리에 있어서나 아담 스미스의 開明性이 없는 도그마이다. 이 도그마가 英美에서 復活한 것은 이론적인 타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英美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局面轉換을 위한 便法(political expediency)으로 그것을 절묘하게 활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나는 본다).

自由放任의 정책은 미국을 포함하여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英美에 있어서는 1980년대를 分界로 하여, 금융산업에 big bang이라고 하는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금융산업은 완전히 자유화됐다. 금융산업은 또 IT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규모로 ‘雄飛’하였다. 금융거래의 규모와 속도는 실물거래의

9)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사상의 전제는 대부분 옳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說破했다. “각 개인이 각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오랜 관행에 의하여 共認된 ‘自然的自由’(natural liber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가진 자, 또는 취득한 자에 영속적인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compact)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사적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이 항상 일치하도록, 하늘 위로부터 다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실제문제로서 兩者가 일치하도록 地上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계발된 이기심이 항상 공익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은 경제학의 원리로부터 올바르게 演繹된 것도 아니다. 또 이기심이 일반적으로 開明한 마음 위에서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각 개인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조차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는 사실이다.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은 각자가 따로 행동할 때에 비해, 항상 덜 민첩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John Maynard Keynes, “The End of Laissez-faire”, in *Essays in Persuasion (Collected Writings, vol. IX)*. 이 논문의 제4절의 첫머리 참조.

규모와 속도를 크게 앞질러, 미국경제의 ‘比較優位’는 단시일 내에 제조업으로부터 금융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자본주의는 1980년대에 산업자본주의로부터 금융자본주의로 전환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所得源이 실물부문으로부터 금융부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 회사의 이익의 추이를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금융회사의 이익은 전체 주식회사 이익(corporate profit)의 10~15% 수준이었었는데, 21세기에 접어든 후로 그것은 30~40% 수준이 되었고, 일반회사의 금융영업이익을 합하면, 50%에 달하게 되었다.¹⁰⁾

이와 같은 經濟構造 및 所得構造의 변화는 경제생활에 대한 국민의 思考方式과 價値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거시정책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금융거래에는 投機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많은데, 투기로 인한 소득은 不確實·不安定하며, 그 크기는 생산요소의 生産性(productivity)과는 관계가 없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기업의 이익이나 국민의 소득의 중심이 생산성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射倖心이 조장되어,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경제생활은 건전한 기업정신, 건전한 근로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또, 국민경제의 安定性(stability)도 줄어갈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 국민이 보이고 있는 경제생활에 관한 태도의 변화도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국민의 個人貯蓄率이 거의 0에 가까운 이유 중의 하나도 투기심리가 다소나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건전한 기업정신, 건전한 근로정신은 건전한 경제의 기본인데 지금 월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성 금융업은 케인즈가 그의 『一般理論』에서 지적한대로 건전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본질상 금융업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2次産業이 主力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가지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유지했거나 상실한 성장동력을 회복한 경우는 없다.¹¹⁾ 한국의 경제회복과 양극화의 해소가 이루어지자면, 무

10) Andrew Glyn, “Finance’s Relentless Rise Threatens Economic Stability”, *Financial Times*, April 27, 2006, p. 13.

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이론을 탈피하여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경제의 回生策을 강구하며,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정책의 一貫性 및 整齊性

신정부의 인사들은 그들이 어떤 경제를 물려받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이 정권의 第1聲은 〈東北亞中心國家〉, 〈東北亞 物流허브〉, 〈東北亞 金融허브〉 등이었다. 그러나 이 구호들은 이제 많이 퇴색한 감이 있다.

신정부는 所得分配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소득분배의 형평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IMF 이전의 압축성장시대에는 적절한 정책방향이었으나,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政策基調下에서는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新自由主義의 辭典에는 分配政策이라는 語彙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약 1년 동안 不動產 投機抑制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부동산 保有稅의 重課, 투기지역 부동산 去來의 증과세, 거래 허가제 등 劇藥處方을 통해 단기적으로 특정지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流動性的의 供給過多, 低金利 유지, 계속되는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지정 등 부동산보유의 誘因은 계속 제공하면서, 투기의 症候(symptom)를 제거하는 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대해 투기억제에 얼마나 성공할지 미지수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지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세계최고층 건물의 건축 등이 보도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밀

11) 이점에 관해서는 Joseph E. Stiglitz, *The Roaring Nineties*, W.W. Norton, 2003, pp. 19-24 참조. Stiglitz는 금융업, 제조업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成長動力은 엄청난 赤字財政, 經常收支赤字에 의해 지탱된 것이었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과도한 긴축을 강요한 것은 僞善이었다는 것, 미국의 권고에 따른 모든 나라의 경제가 다 위기를 맞았다는 것, 유일하게 중국의 성장동력이 유지된 것은 중국이 미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려들고 지방도시는 침체하고 있다.

4) 한미 FTA

최근 들어, 한미 FTA라는 중대한 事案 하나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미 협상이 시작되어, 금년 내로 타결되리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한-칠레 FTA가 여러 해를 거쳐 성사됐고, 한일 FTA는 몇 년을 두고 연구와 협상을 하였는데도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한 전례에 비하면, 한미 FTA 협상은 超高速으로 進展되는 감이 있다.

무릇, FTA의 得失은 당사국 간의 通商의 흐름만으로 논할 수는 없다. 다른 모든 국제관계가 다 그렇다시피, FTA는 경제적인 의미 못지않게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한-칠레 FTA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 큰 중요성이 없었다. 이에 비해 한일 FTA는 경제적인 의미 못지않게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안이었다.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나라의 존재 자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는 본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電光石火처럼 처리하려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 FTA로부터 바라는 이유에는 뚜렷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經濟 外的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에 못지않게 강할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는 且置하고 경제적인 得失의 몇 가지를 常識的인 次元에서 一瞥해보자. 미국의 소원은 IMF 때에 완성하지 못한 금융부문, 서비스부문, 농축산부문, 문화부문 등의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규제철폐, 정부역할의 축소 등의 과제를 完結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 의미는 IMF 개혁의 연장선에서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물론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의 교역이나 그 밖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양보’는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끝내는 빠짐없이 관철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것 같다. 우선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서 GDP의 증가가 가속화할 것과 미국인 투자가 크게 늘

어나서 고용이 증대하고 성장 동력이 점화될 것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대와 결과 사이에는 몇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미국경제의 현황 및 세계경제의 大局을 보면,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하여 대미 純輸出을 크게 늘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는 본다. 미국의 經常收支 赤字가 GDP의 6%에 달한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대폭 늘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수출 증가의 폭이 아니라, 원貨의 對달러 환율의 하락이 아닐까. 한국 수출의 大宗인 전자상품의 미국 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깝고, 자동차도 현지생산이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기타 품목의 관세율도 2~3%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관세율은 11.2%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폐될 경우, 대미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수년 후에는 한국의 對美 經常收支 黒字가 赤字로 돌아선다고 한다.¹²⁾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 모르겠으나,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업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농축산업 보호를 경제정책의 首位에 두고 있는데, 한국은 예외인가. 주무관청에서는 쌀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그 ‘특전’은 얼마나 버티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 FTA를 하면서 그것을 버틸 명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 미국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금융의 허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한다. 보도에 의하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는 이미 “新金融서비스를 미국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¹³⁾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 나라는 무엇을 바라는지 나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금융산업은 미국 最強의 산업인데 반해, 한국 最弱의 산업이라는 점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나라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금융을 개방해도 한국으로부터 영향받을 여지는 희박한데 비해, 한국이 미

12) 권영애 변호사의 시론 “한미 FTA 정말 장밋빛인가”, 『경향신문』 2006. 2. 21. 사설란.

13) “한미 FTA 대응방안” 정부보고서 단독 입수, 신금융서비스 미국수준 개방 — 『내일신문』, 2006. 5. 2. 1면.

국수준으로 개방한다면 사정은 다를 것이다. 미국처럼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인지, 미국의 “금융기법”을 배우자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Superpower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전략을 가진 나라를 의미한다. 모든 정책을 이에 맞추어서 시행하며, 다른 나라를 대할 때, 자유로이 “룰북”(rule book)을 편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 Superpower와 보통 나라가 대등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superpower에 대하는 나라는 友邦이던 아니던 신중해야 한다. 이쪽에서 아무리 기대를 해도 superpower의 세계전략이 그 기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복잡한 나라이다. 4대국이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틈에 서서 무엇인가 하자면 superpower와 대립해도 재미없고, 항상 그 그늘에 서도 불리할 때가 많을 것이다.

한미 FTA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IMF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변모를 상상하면 될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효과, 이를테면 양극화, 작은 정부, 이에 따른 정부역할의 축소, 민영화, 기업 M&A의 증가 등이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FTA에 목마른 나라가 superpower와 결합한다고 하니 이것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의 심정은 알만하다. 그러나 superpower의 善意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사항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3. 앞으로의 진로 - 맺는 말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 가지 암시적인 논의를 했고, 짧은 글의 末尾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상세하게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이에 관련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管見을 피력함으로써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1) 고정관념 · 선입견의 탈피와 實事求是

참여정부가 政經癒着의 단절과 민주적 국정운영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아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정책에는 開發年代로부터 내려온 官僚式 固定觀念, 이에 맞서서 대립해 온 在野式 先入觀 및 신자유주의의 偏見이 혼재해 있다. 中正과 均衡을 잃은 이런 觀念이 역사적 전환기에 처한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柔軟하고 知性的인 정책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左와 右, 進歩와 保守 등의 색깔논쟁에 拘碍받지 말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實事求是의 방법으로 현실 중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내야 한다.

2) 정부 역할의 “재발견”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것을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상실한 정부의 역할을 “再發見”(reinvent)해야 한다.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다. 임기를 넘어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민을 위하여 길(道)을 밝히고, 자손을 위하여 태평을 연다’¹⁴⁾는 큰 포부를 가지고 책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3) 인력 수급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 발전전략의 焦點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인력의 개발과 그 활용에

14) ‘천지를 위하여 뜻을 세우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 宋나라 張載의 말. (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大平) 『橫渠文集』.

있다.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雇傭의 創出이다. 정부도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遠視的인 견지에서 人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장원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정부의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노동시장은 국민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매우 불완전하다. 마치 제대로 된 기업치고 계획 없는 기업이 없듯이, 정부가 인력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제대로 된 고용정책을 펴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는 물론 불확실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도 많다. 인구의 高齡化, 출생률의 저하, 여성 고용 기회의 증대 등은 확실한 추세일 것 같고, 아시아의 대두, 자원의 부족과 그 가격의 폭등, 세계경제의 불균형 지속불가능 등은 모두 확실하게 예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이 다 잘 예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개발연대에 있어서와 같은 통제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인력 수급의 미래를 투시하여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양자를 match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은 교육정책, 산업정책, 移民政策 등의 구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인력수급 10개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4) 자유화, 개방화의 우선순위

양극화의 심화와 성장동력 약화의 뿌리는 깊고, 그 그늘은 넓게 퍼져 있는데 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어렵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들은 對內的인 자유화와 구조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너무 과감하게 개방화·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더욱 어려워졌다. 그것은 자유화의 순서를 거꾸로 시행한 非正常的인 정책이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더욱 과감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성장동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대학과정을 가르치면, 중·고등학교 과정은 저절로 터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불행한 학생의 성적은 더욱 나빠지고 공부는 더욱 싫어질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면, 우선 국내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유화, 자율화, 제도의 정비 등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遠視力을 가진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발전의 기본은 언제 어디에 있어서나 좋은 정부이다.

우리는 자유시장 체제를 원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문패가 달린 시장원리주의는 환영할 수 없다. 그 철학(競爭至上, 株價至上, 弱肉強食 등)에는 건전한 경제, 건전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며,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치를 右派와 左派 구별없이 populist의 집단으로 분열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劣化시키는 씨가 內在되어 있다.¹⁵⁾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철학을 가지고 번영을 지속할 수는 없다.¹⁶⁾ 미국이나 유럽이나 신자유주의를 金科玉條로 삼는 한, 몰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발전 방식과 국민성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발전 방식이 있다. 자연조건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의 배경도 나라마다 다르다. 어떤 하나의 방식만이 좋을 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한국사람들은 특유의 長技가 있다. 한국이 開發年代에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당시의 경제 운영이 시장원리를 존중했기 때문도

15) 미국에서 소득분배가 계속 나빠지는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 Martin Wolf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If income distribution remains as skewed as it has been, --- politics inevitably become more populist: the U.S. “right” has become “pluto-populist” - an alliance of free-marketeers, nationalists and social conservatives - and the “left” is increasingly “protecto-populists” - an alliance of protectionists, dirigistes, social liberals and anti-nationalists. This endangers both intellectual coherence and sensible policymaking. Martin Wolf, “The Rich Rewards and Poor Prospects of a New Gilded Age”, *Financial Times*, April 26, 2006, p. 13.

16) 이 점, Stiglitz의 앞의 책, pp. 19-20 참조.

아니고, 정부의 규제가 적기 때문도 아니었다. 당시의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심어 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¹⁷⁾ 경제운영의 要諦는 기업과 국민의 사기를 부추기는 데 있다.

경제운영은 나라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 또 달라야 한다는 일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인의 국민성에 맞는 방법으로 1980년대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부터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여,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잃어버린 10년은 5년이 연장되어 15년이 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가 好轉됐다고 한다. 小泉정부는 “개혁 없이는 경기회복 없다”는 구호를 들고 나름대로 개혁노력을 했으나 실제로 이룬 것은 별로 없었다. 郵政事業을 민영화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집권을 연장하기는 했지만, 그 개혁에 큰 의미는 없었다.¹⁸⁾ 일본인은 한국인처럼 중국이나 인도에 적극 진출하지 않는다. 나라 안에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명운을 건다. 그것이 일본의 방식이며, 그 방식으로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해 엄청난 수출을 증가시키고 성장동력을 회복했다. 높은 저축률, 활발한 수출, 자본사용의 저효율 등 일본경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희생시킨 것이다. Martin Wolf의 말대로, 오늘의 새로운 일본은 기본적으로 옛날의 일본인 것이다.¹⁹⁾ 일본을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라마다 성장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예를 들었을 뿐이다.

2006. 3. 15

17) 이것은 개발연대의 정책기조가 지금도 타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18) 이 점에 관하여서는 榊原英資, 『經濟の 世界勢力圖』, 文藝春秋社, 2005, pp. 167-169 참조.

19) Martin Wolf, “Japan’s Failure to Reform has not prevented its Recovery”, *Financial Times*, 2006. 3. 12.

參考文獻

- 서울대 대학원 사회과학대 자치회, 『IMF와 한국경제위기』 자료집, 1998.
- KDI 경제정보센터 해외홍보팀, 『外信이 본 99년 한국경제』 (I), (II). 1999. 12.
- 유용주 외, 『IMF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2000.
- 박영철 외, 『금융·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
- 재정경제부,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2001.
- 모종린·임성학, 「한국의 경제개혁: 무엇을 해야 하는가」(모종린, 전홍택, 이수희 편, 『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조순, 『창조와 파괴』, 법문사, 1999.
- 趙淳, 「韓國·中國·日本의 經濟改革」,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42輯, 2003.
- 함정호(편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식산업사, 2004.
- T. G. Carpenter and D. Bandow, *The Korea Conundrum -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Palgrave, 2004.
- Sea-Jin Chang, *Financial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Korean Business Groups*, Cambridge Univ. Press, 2003.
- Soon Cho, *The Dynamic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1994.
- Ajai Chopra, et al., *From Crisis to Recovery in Korea: Strategy, Achievements, and Less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y 14, 2001.
- Sung-Hee Jwa, *A New Paradigm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 From Government Control to Market Economy*, Palgrave, 2001.
- Donald Kirk, *Korean Crisis - Unraveling of the Miracle in the IMF Era*, St. Martin's Press, 1999.
- Paul Krugman,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W.W. Norton, 1999.
- Danny M. Leipziger, *KOREA - Transition to Maturity*, Pergamon Press, New York, 1988.

Marcus Noland, *Avoiding the Apocalypse -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Bo Soedersten (ed.),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algrave, 2004.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W.W. Norton, 2003.

_____, *The Roaring Nineties*, W.W. Norton, 2003.